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법무부 소관)

2014. 3.

대한민국정부

목 차

1. 법 무 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의 1인당 업무량 지속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1
- 성폭력범죄 불안 가중과 전자발찌 관리 관련 검·경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것 1
- 변호사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 법조브로커가 생기는 현실을 감안하여 변호사에 대한 전문분야 인증시스템을 개발할 것 1
- 로스쿨생의 취업난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2
- 해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여 법무부 내에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 TF팀을 구성할 것 ... 3
- 형사부 검사의 인사 혜택 방안을 마련할 것 3
- 수사관 처우개선과 인사적체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4
- 초임검사의 인성교육, 자질교육, 소양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것 4

- 여대생 청부살인사건 살인교사범 형집행정지 악용 사례 등을 반면 교사로 삼아 형집행정지 운영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5
- 형집행정지 도주자가 최근 5년간 24명에 달하는 등 관리부실로 매년 형집행정지중 도주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2. 대검찰청

- 신속하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할 것 7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7
- 보복범죄의 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것 7
- 검사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검사의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것 8
- 고소장 접수 관련 통지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 11
- 검찰개혁과제로서 고소장 사본 송부제도 확대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 11
- 검찰개혁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1
- 검사의 징계기준 관련 일반공무원과 같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비리 혐의 검사의 의원면직이나 직권면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 장애인 성폭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 12
- 친족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12

- 인권침해 관련 중앙합동신문센터 운영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
- 추징금 미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3.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 국가배상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 14
-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에 따라 외국어 통역원을 대폭 늘리고, 지검 운영 또는 고검 운영 중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15

4. 부산고등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 울산지방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 형사조정제도 관련 조정의뢰를 활성화할 것 15
- 부산지역의 추징금 미납률이 가장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
-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관련, 수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조 품질증빙서류가 제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전비리 관련자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할 것 16

- 기술유출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소율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
- 전국 폭력조직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

5. 광주고등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 제주지방검찰청

- 인권침해신고센터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18
- 불구속재판 중 도주하여 자유형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
-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통역원의 충원 대책을 마련할 것 .. 19
-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
- 제주도의 중국 자본유입에 있어서 폭력집단 관련 의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
-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 20

6. 대전고등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청주지방검찰청

- 세종시 출범과 함께 관할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1
-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21

-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1
- 근무 기간 동안 검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22
- 관내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2

7. 대구고등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 독직폭행 등 검찰 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 23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1인당 업무량 지속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법무공단법 개정을 통한 변호사 증원 - 변호사 정원을 기존 40인에서 60인으로 20명 증원 · '13. 12. 19. 국회 본회의 가결 · '14. 1. 7. 공포 및 시행 ※ 공단법 개정으로 변호사 증원이 이루어져, 향후 변호사 1인당 업무량 경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 예상
	○ 성폭력범죄 불안가중과 전자발찌 관리 관련 검·경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것	○ 법무부·경찰 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강화 - 경찰과 KICS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13. 6. 19.) · KICS 연계 이후 현재까지 전국 경찰관서에서 총 8,855건 신상정보 활용 - 경찰과 전자감독관련 업무 협의 · 경찰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 추진 지시('12. 3. 20.) 이후 전국 249개 경찰서와 현재까지 총 1,138회 업무 협의 실시 ※ 일선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 간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간담회 정례화' 추진 예정('14. 상반기)
	○ 변호사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 법조 브로커가 생기는 현실을 감안하여 변호사에	○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10년부터 대한변협에서 시행중에 있고, 현재 738명의 변호사가 1,072개 분야 전문가로 등록되어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대한 전문분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할 것	○ 그러나, 등록변호사 1만 6천여명에 비하여 전문분야등록제 활용도가 많이 낮은 편이므로 대한변협과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로스쿨생의 취업난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률전문가들이 사회 각층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14. 1. 법무실 내에 경영인, 해외무역 업무관련 종사자, 헤드헌터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보강 관련,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지역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 구축 - '13년 서울북부, 성남, 군산, 원주, 광주 등 총 5개 지역 구축 완료. '14년 20개 지역 구축, 이후 전국 58개 지역 확대 예정 ○ '11년부터 매년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인력 보강에 더욱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p>※ 1기 기본교육(85명), 심화교육(76명), 고급교육(69명), 2기 기본교육(36명) 수료</p> <p>○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를 위한 피해자 권리 안내서 10만부 배포('14. 7.), “다링”(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목적 걷기대회) 개최('14. 4.), “사랑의 리퀘스트” 출연('14. 4.),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워크숍 개최('14. 5.),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 워크숍('14. 8.) 등을 개최하여 홍보할 예정임</p> <p>○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지원 제도를 명확히 안내하겠음</p>
	<p>○ 해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여 법무부 내에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 TF팀을 구성할 것</p>	<p>○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 TF」를 구성하여, 지적된 사항은 시정·처리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p>
	<p>○ 형사부 검사의 인사혜택 방안을 마련할 것</p>	<p>○ '14년 정기인사에서 형사부 검사의 법무부·대검 등 기획부서 발탁 기회를 충분히 제공</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 수사관 처우개선과 인사적체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직무대리 증원, 검찰수사관 직급 구조 개선 등 수사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관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복지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음 ○ 특히, 대검 「수사관 비전 T/F」에서 수사관의 인사적체 해소, 복지개선, 분야별 전문수사관 인증제도 도입 등 수사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음
	○ 초임검사의 인성교육, 자질교육, 소양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로서 바람직한 자세와 소명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신입검사 교육 단계부터 국가관, 공직관, 청렴, 인성 등 소양교육을 대폭 강화함 ○ 2014년 사법연수원 출신 신입검사 전반기 과정(5주)에 직무교육 외의 소양교육 등을 28과목 78시간을 편성하였고, 후반기 과정(3주)에 15과목 37시간을 편성할 예정임(전년 대비 약 10% 증가) ○ 2014년 로스쿨 출신 신입검사 과정은 190시간 이상 소양교육 등 교과목을 편성할 예정임(전년 대비 약 25% 증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생활에 모범을 보인 훌륭한 선배들과 대화시간을 확대하여 생생한 현장 경험과 바람직한 복무 자세를 전수함으로써 교육효과의 극대화 도모 ○ 청렴사례 교육, 청렴 상황토론, 검사윤리강령 등 청렴 관련 교과목 9시간 편성 ○ 검사로서 자세 확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바이블로서 '검사의 도(道)'를 개발하여 교육 기본교재로 활용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대생 청부살인사건 살인교사범 형집행정지 악용 사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형집행정지 운영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1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적 전문성 강화, 형집행정지 심의 위원회 필요적 개최,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이의권 보장 ○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시행('1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집행정지 결정시 주거지 제한, 호화 병실 사용금지 등 부가조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집행정지 도주자가 최근 5년간 24명에 달하는 등 관리부실로 매년 형집행정지중 도주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집행정지자 일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집행정지 사유 해소된 21명 형집행정지 취소 및 잔형집행('13. 5.) ○ 형집행정지자 부가조건 준수 여부 확인('14. 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 이행 실태 점검('14. 4. 예정) ○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운영내실화 방안 마련('14년 상반기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의 전문의 추가 위촉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 신속하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할 것	○ 국정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 가능한 자료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음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원인 분석 후 심도 있는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음
	○ 보복범죄의 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것	<p>○ 보복범죄자는 원칙적 구속, 양형 기준 최고형 구형 등 엄정 처벌하고,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 위치확인장치 및 이사비 지급, 가명조서 작성, 법정동행, 피해자 석방통지 등 신변보호 조치토록 일선 청 지시('13. 7.)</p> <p>○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공소장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최소화하여 기재하고, 체포·구속 통지 시 범죄사실에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토록 기재방식 변경 지시('14. 1.)</p> <p>○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활성화 지시('14. 2.), 향후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예정</p> <p>○ 보복범죄 방지를 위하여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정 예정임('14. 4.)</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최근 2년간의 보복범죄 원인 및 양상 등을 분석('14. 3. 연구용역 발주),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검사의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찰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 비위로 중징계 청구의 경우 그 상급자와 감찰담당자에 대하여도 감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13. 8.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개정 ○ 내부 비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비위혐의 검사 5명 해임, 면직 처분하는 등 엄정한 징계 처분 ※ 뇌물수수 검사 사건 관련 서울고검 검사 등 검사 범죄사건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특임검사 임명하여 수사 ○ 검찰시민위원회 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 6. 전국 5개 고검에 「검찰 시민위원회」 신설하여 검사 등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를 심의 - 검찰시민위원회에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하여 검사 외 전문가로부터 실질적인 조언 실시('13. 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모니터링단」 설치하여 국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13. 6.) ○ 검찰담당자 회의 등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 검사 등 예방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전국감찰부장검사 회의 및 전국 검찰담당검사 교육 실시('13. 3. 및 5.) ○ 『대검찰청 검찰업무 매뉴얼』 발간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 검찰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여 검찰조사, 징계 및 징계절차의 해설·사례집 발간('14. 3.) - 검찰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처리 기준 제시 ○ 상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징계사례를 일선 청에 배포하고 수시 교육을 통해 예방 감찰 활동 강화 ○ 대검 사무감사 활용 청렴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 사무감사시 검찰 본부장이 직접 일선 청에 내려가 임관 5년차 이하 검사들을 상대로 청렴교육 실시 - '14년 사무감사부터 매년 일선 전 지검을 상대로 사무감사 실시('14년 18개 지검 사무감사 예정) <p>※ '13년까지는 격년제로 사무감사 실시</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이 비교적 적은 검사들을 대상으로 비위감찰 사례 등 전파, 교육 ○ 일선 청 기관장의 청렴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일선 청 검사들의 청렴의식 향상에 효과적 - 비위감찰 사례, 민원인 불만 사례, 클린콜 상담 사례 등을 발굴하여 일선 청 기관장의 강의 자료로 활용 ※ 기관장 우수 강의 사례 전국 청 전파 및 공유 ○ 일선 청 청렴 현장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8개 전 지검을 반기별 1회씩, 총 36회에 걸쳐 현장 점검 ※ '13년까지는 부진 청 위주로 단발적 현장 점검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사례집 발간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및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의 해설 및 사례집 개정 발간 예정('14. 5.) - 검찰클린시스템의 일선 청 행동강령 질의사항, 타부서의 행동강령 사례 등을 참고 - 사례집 발간 후 일선 청 배포, 행동강령 교육 등 실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 소식지 『Monthly 청렴』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 청 검사 및 직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하여 '13. 7. 창간 후 매월 발간 - 일선 검사 및 직원들에게 청렴 정보 제공 및 청렴 우수 청렴 시책 등 공유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장 접수 관련 통지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지침안을 검토 중에 있음 ○ '14년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개혁과제로서 고소장 사본 송부제도 확대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지침안을 검토 중에 있음 ○ '14년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개혁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13. 7.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계획」에 따라 이행을 완료하였거나 이행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징계기준 관련 일반공무원과 같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비리 혐의 검사의 의원면직이나 직권면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재징계 청구 등 검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13. 10.), 법사위 계류 중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143호, 시행 '05. 2. 24.)에 따라 검사가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 등에는 의원면직이 제한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성폭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전담검사체제 강화 및 첨단 과학수사기법(유전자감식, 영상·음성·심리·진술분석 등)을 활용한 객관적 증거 취득, 피해자 면담 시 진술분석관, 진술조력인 등 전문가 참여 확대, 서울중앙지검과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 연계 화상협력시스템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유도하고, 전자발찌, 치료감호, 약물치료 등 다각적 재범방지대책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전담검사에게 사건 배당, 첨단과학수사기법(유전자감식, 영상·음성·심리·진술분석 등) 활용으로 객관적 증거 취득, 피해자 면담 시 진술분석관, 진술조력인 등 전문가 참여 확대, 서울중앙지검과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 연계 화상협력시스템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강화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로 미성년 친딸을 대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p>으로 자행되는 친족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친권상실청구 확대, 정신감정청구를 통해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성적장애 발견 시 치료감호, 약물치료청구 및 전자발찌부착청구를 강화하는 등 재범방지대책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음</p>
	<p>○ 인권침해 관련 중앙합동신문센터 운영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중앙합동신문센터나 하나원에서는 강제처분적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휘하였음</p> <p>○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나 불법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해 나가겠음</p>
	<p>○ 추징금 미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법령개정) '13. 7.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취지를 전체 범죄로 확대하여, 추징금 시효연장, 은닉재산 확보, 추징금 환수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은닉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추진 중 ('13. 11. 개정안 국회 제출)</p> <p>○ (전담반 운영 활성화 등) 「범죄수익환수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은닉재산 추적에 만전을 기하고, 파악된 재산에 대해 자력 강제집행권·사실조회권 뿐</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p>아니라, 추징보전명령, 추징금 가납 명령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추징금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음</p> <p>○ 아울러, 추징금 미납자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전자압류제도' 도입·시행 등 새로운 집행기법 발굴은 물론,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은닉 재산 조사권 강화, 추징금 시효 연장, 징벌적 성격의 추징금에 대한 납부 강제 방안 검토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p>
<p>서울고검 서울중앙 지검·서울 동부지검· 서울남부 지검·서울 북부지검· 서울서부 지검·의정부 지검·인천 지검·수원 지검·춘천 지검</p>	<p>○ 국가배상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p>	<p>○ 수감기간 중 국가배상사건 1,620건 접수, 907건 처리하고 713건 계속</p> <p>※ 전년 수감기간 미처리 325건</p> <p>○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신청 후 상당 기간 경과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히 조사하여 '13. 11. 이후 심의회 상정 및 처리건수가 약 20% 증가하였고, 사실조회 회신 지연 기관에 회신을 독촉하여 신속처리를 도모하고 있음</p> <p>○ 향후 처리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심의 기일 또는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적기 처리 계획 검토 중임</p> <p>※ '12. 5. 31. 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 사채 투자자들이 신청한 국가배상사건은 심의 중, 관련 민·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심의하여 처리 예정임</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지검·서울 동부지검· 서울남부 지검·서울 북부지검· 서울서부 지검·의정부 지검·인천 지검·수원 지검·춘천 지검	○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에 따라 외국어 통역원을 대폭 늘리고, 지검 운영 또는 고검 운영 중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 관련 범죄 증가로 관내 지검별 통역원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 중 ※ 통역원 위촉현황 : 서울중앙지검 104명 (동부·남부·북부지검은 중앙지검 위촉 통역원 활용), 서울서부지검 34명, 의정부지검 29명, 인천지검 38명, 수원지검 117명, 춘천지검 18명 ○ 사건을 수사하는 지검별 통역원 관리, 운용이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용, 고검단위 통역원을 풀(pool)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적정성도 검토 중임 ○ 다문화 가정의 증대 및 국내 외국인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다양한 국적의 통역원을 확충하여 범죄 수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형사조정제도 관련 조정의뢰를 활성화 할 것	○ 작년 10월 이후 부산지검의 조정의뢰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부산지검 자체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 사건송치 단계부터 사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활발히 하고, 조정 성립률이 높은 우선적 형사조정 대상사건을 선정하여 의뢰 증대 도모 - 각 검사실에서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선별하여 형사조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매월 형사조정 의뢰 사항을 점검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부산지역의 추징금 미납률이 가장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3년 부산지검 추징금 집행률(집행건수/전체건수)은 비교 청 중에서 1위로 상위권이나, 추징액 다액사건이 있어 미납액이 다액으로 나타남 ○ 현재 기능별(검거기동, 강제집행, 재산추적업무)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집행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앞으로도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는 고액 미납자는 출국금지하여 도피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산 추적 및 보존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음
	○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관련, 수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조 품질증빙서류가 제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전비리 관련자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할 것	○ 현재 수사 중인 시험성적서 위조 등 사건은 '09~'12년경에 이루어진 범행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13.9.11.~'14.2.28.(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원전비리사범 72명(구속 25명)을 적발하여 기소하였음 ○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원전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기술유출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소율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찰의 기술유출사건 단속은 증가하였으나 법원은 '영업비밀' 요건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추세를 보여 검찰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 향후 검찰은 기술유출수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보다 강화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를 철저히 하여 기술유출사범 엄단에 최선을 다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폭력조직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검은 관내 폭력조직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조직폭력사범 199명 인지하여 64명 구속기소 ○ 향후에도 폭력조직에 의한 서민생활 침해, 이권개입, 탈세, 마약류 밀반입 등을 엄단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실한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는 '제3세대 조폭'들의 범죄 수익 박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원천 차단 ○ 울산지검의 국감 후 5개월('13. 10. ~ '14. 2.) 동안 조직폭력 사범 현황은 90건/90명이고, '14. 2. 울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구속함 ○ 지속적인 검찰 수사와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를 통해 울산지역에서 조직폭력사범이 활동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 창원지검 관내 조폭은 과거 집중단속으로 와해된 이후 적극적인 활동 조짐은 보이지 않으나,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활동상황을 점검하는 등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행성 게임장, 사금융·채권 추심행위, 서민상대 갈취범행 등을 집중 단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조폭의 자금원 차단을 위하여 '통대한 대출' 등 불법 대부업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인권침해신고센터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민원인들이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인권침해 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하여 고소·고발장이나 진정서를 민원실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고 건수가 많지 않음 ○ 대검 정책기획과-10238호(2012. 8. 14.) 「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운영 현황 점검과 관련 광주지검 실정에 맞게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 - 인권침해 신고센터(민원실내) 설치·운영지침 준수 독려 - 신고전화 설치 (피해자 지원팀 : 224-0069) - 시민옴부즈만과의 연계 - 홍보를 위한 안내문 게시 -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팝업창 설치
	○ 불구속재판 중 도주하여 자유형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법원에서 불구속재판 원칙을 강조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일부 자유형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자유형 미집행 사안에 집행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법원에서 유죄 인정하여 실행 선고할 경우 적극적으로 법정 구속토록 요청
	○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통역원의 충원 대책을 마련할 것	○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 수사 및 외국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언어의 통역인을 확보하여 정확한 통역을 통한 수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늘어나는 외사사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광주지검에서는 '11년 8명, '12년 9명을 위촉하였으나 '13년에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23명의 통역자원봉사위원을 위촉하였음 - '13년 기준 광주·전남 외국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다수인 점을 반영 위촉위원 23명 중 중국인 4명, 베트남인 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등 통역위원이 현재 충원되지 못한 언어들이 있으므로, '14년 통역위원 위촉시 다양한 언어의 통역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여러 직역의 사람들을 통역인으로 확보할 예정
	○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모든 사건 관계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신속한 사건처리의 필요성에 공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복잡한 사건의 증가, 검사의 업무 부담 가중, 임의수사 원칙 강화 등의 원인으로 사건처리 부담이 가중 ○ 수사 인력의 전문화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장기 지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 ○ 부장검사들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거나, 부장검사들의 경험이 수사 검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의 책임을 강화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 중국 자본 유입에 있어서 폭력 집단 관련 의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 11. 유관기관(도청, 경찰,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외사사범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불법자금 유입 여부 점검 ○ 현재까지 특이동향 없으나, 국내 폭력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감시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엄정 대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 등 관내 유관기관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시스템을 강화 ○ 향후 '담보금 미납선박 및 불법어구 몰수', '불법조업 전력 중국선원 자료 축적·체계적 관리' 뿐 아니라 유관 기관과 정기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불법조업 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세종시 출범과 함께 관할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세종시 인구는 약 12만명으로, 아직까지 검찰청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으나, ○ 국무조정실 등 주요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으므로, 세종시가 가능한 신속히 안착하여 도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수사 및 형집행 등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하겠음
	○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민원인들이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역할을 잘 모르고,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있는 것을 알더라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민원인들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보다는 바로 고소·고발장이나 진정서를 민원실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고 건수가 많지 않음 ○ 대검 정책기획과-10238호(2012. 8. 14.) 「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운영 현황 점검 지시에 따라 - 우리 청 2층 인권침해 신고센터 및 전화신고(042-472-9014) 설치 - 우리 청 홈페이지에 인권침해에 대한 알림 팝업창 및 인터넷 신고 메뉴 설치
	○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국정감사 당시 지적되었던 사건들은 모두 수사가 종결('13. 12.)되었으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사건 지연이 없도록 유의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근무 기간 동안 검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회에 걸쳐 검사들로부터 전문 분야 지망을 받아 46개 그룹, 173개 전문 분야를 선정한 후, 분야별로 공인 전문검사 인증 실시('13. 11. 및 '14. 3.) ○ 전문분야별 커뮤니티 구성 및 활동('14. 3.부터) ○ 대전지검의 경우, '12 3. 설립한 『특허 소송 실무연구회』를 더욱 활성화('14. 3. 17차 세미나 개최) ○ 「디지털수사 실무연구회」를 창설하여 검사와 수사관의 디지털 수사 관련 전문성 강화('14. 3.) ○ 부별로 전담 업무에 대한 자발적인 스터디 모임을 적극 지원하고,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대전 지역 내 교육기관에서 검사들이 업무 관련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이수를 활성화 하는 등 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 관내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 5.부터 시행 중인 '현장 공감 프로젝트' 지속적 추진과 대전지검·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의 역점 추진 자원봉사활동인 '수호천사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통해 소년범 선도 및 학교 폭력 예방에 노력하겠음 ○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 및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년범의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구고검 대구지검	○ 독직폭행 등 검찰 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	○ 독직폭행 등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검찰담당 검사가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보장, 인권침해 실태 점검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함 - '13년 하반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횟수는 32회 - '13. 11. 26. ~ 28. 구속 피의자 3명 등 총 26명의 민원인에게 조사과정에서 폭언, 욕설 등 인권침해 사례 집중 점검(위반사례 없음) ○ 대부분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고 체포나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들로 혐의 입증할 증거가 없어 각하 또는 혐의 없음 처분함 ※ '13. 10. ~ '14. 2. 독직폭행 등 총 24건 혐의 없음, 각하, 타관 이송 처분 ○ 앞으로도 독직폭행 등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음